세월호에 막힌 국회 '추석前 정상화' 비관론 우세

與, '양보없는 원칙' 고수…대화의 문은 열어놔

野, '3자협의체' 촉구…국회의장 역할에 주목

세월호특별법 대치 정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선 연휴 전 정기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추가 대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닫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설사 대화의 장이 마련되더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주장하는 기소권, 수사권을 협상 대상으로 사용하면 대화가 안 된다"며 "진실하고 진솔되게 대화하고 그래야 저희와 대화가 되고 좋은 방안으로의 협의가 가능한데, 뻔히 새로운 주장이 마음 속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전향적으로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사회 각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중재기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종교계 등 사회 원로들이 함께 중재에 나서는 협의기구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놀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유가족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3자 협의체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세월호 가족대책위까지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 돌파구 마련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거센 만큼 여야는 추석연휴 전 협상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첫 본회의 개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정 의장의 중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양동시장 찾은 박영선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한 상인이 한과를 먹여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與, '선진화법' 헌소 추진

野, "어불성설" 즉각 반발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 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토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도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라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위헌 여부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정치적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만든 법으로, 여당이 됐다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선, 진도·광주 전통시장서 잇단 '민심행보'

세월호 실종자 아픔 달래고

서민들의 추석 민심 살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추석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있는 진도 팽목항 등과 광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세월호 민심'과 '추석 민생'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특히 박 위원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보겠다고 했다며 이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에 앞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진료를 받는 목포한국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는 것 같다"며 "한 번 의장 중재를 이번 주에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 의장은 5일이라도 이 법이 통과돼야 하지 않겠느냐. 추석을 넘기면 국회가 장기적으로 파행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며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면서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과반의석을 가진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진도행에 대해선 "참사 이후 매듭지어지는 것도 없이 가족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이 잊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팽목항으로 이동해 현장의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족들의 공통된 얘기가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정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실종자 가족들은 겨울 바다가 되기 전인 10월 중순까지밖에 수색작업을 못할 것 같다며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분들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 안타까움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국민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귀경길에 광주 전통시장을 들러 추석 민심을 살핀 박 원내대표는 상인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짜 민생국회, 서민 중산층의 민생경제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새정치 '온건파' 연일 회동…勢불리기 나서

박주선·조경태·황주홍 의원 등

추석 민심 듣고 활동 본격화할 듯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외 강경투쟁에 반대하는 '온건·중도파' 의원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박주선·조경태·황주홍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방안과 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회동 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 없이) 병행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치가 민심의 바다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은 민심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하고 있다"며 "민심의 지지를 받지 않은 행보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 의원은 "요즘 광주·전남에서 더 강하게 (온건파의) 목소리를 내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당이 강경파에 끌려가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일에는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 중 일부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난 데 이어 2일엔 '콩나물 모임'과 조찬을 했다. 두 모임 모두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다.

이들은 추석 명절 직후인 10~11일께 다시 회동, 국회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석 민심을 듣고 와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외투쟁 반대 성명파 의원들이 세 불리기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